

경찰, 운수업계 '갑질' 특별단속

경찰이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갑질'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버스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빈발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등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추가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달간 3대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3대 중점 단속대상은 버스·화물

충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

눈덩이…300억원 육박해

충북 지역 물 폭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공·사유시설 피해액이 30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계한 도내 공공·사유시설 재산피해 규모는 295억6400만 원에 달한다. 청주시가 148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괴산군은 70억여원, 보은군은 36억여원의 피해가 됐다.

증평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13억 여원과 1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피해 총액에 신입하지 않은 농작물 피해만 242억여원에 달한다고 도는 밝혔다.

청주시와 괴산군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초과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청주시는 90억원, 증평군은 75억원, 보은군과 괴산군은 6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보은에서 실종됐던 A(77)가 전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7명으로 늘었다. 주택 피해는 전과 1채, 반파 6채, 침수 867채로 집계됐다.

총 18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가 1512명이 귀가했으나 380명은 여전히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다. 침수 차량 수도 전날 1073대에서 1367대로 늘었다.

전날까지 청주 등 충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에는 연인원 1만1729명이 투입됐다. 이날도 서울, 대구, 경북 지원봉사자 등 1600명이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 도는 대전과 세종에서 지원받은 중장비 30대 등 복구 장비 377대를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차량관리 부실·자동차관계법 위반 등

고용부·지자체 등 유관기관 적극 협업

차량 운수회사 등의 ▲운전기사 갑질횡포 ▲차량 등 관리감독 부실 ▲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운전기사 채용 대가 금품수수, 운행시간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배차간격 임의 조정 등을 통한 근무 강요 행위, 차량검사 미실시 또는 부정실시, 차량 수리비·보험료 등 대납 강요,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등이다.

단속기간은 이달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

범죄수사대와 경찰서 부정부패 수사팀·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교통안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정착된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를 단속에 적극 활용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고용부, 지자체 등과 연계해

운수업계의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발굴·수사하고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수업계 종사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제보를 적극 접수해 직접적인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자·상납관계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물에 발 담그고…여기가 '천국'

폭염이 이어진 20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아외 수조에 물을 끌어며 더위를 식하고 있다.

9월부터 생후 6~59개월 어린이도 독감 무료예방접종

오는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6~59개월로 확대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등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리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변경 제도를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생후 6~12개월 영아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12~59개월 영·유아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혈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종 감염병을 백신 하나로 예방할 수 있는 5가 훈합백신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돼 접종횟수가 최대 9회에서 총 3회로 감소될 전망이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 분만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추가해 13개소로 늘리고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도 430명상에서 25명상이 늘어난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상을 위해 국가가 매월 근로소득징여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I'의 월 적립금을 10만원과 5만원 2종으로 확대한다. 월소득 160만원(4인가구) 기준, 3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본인이 부담한 180만원을 포함해 약 100만원을 돌려받는 제도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물로 바꿀 수 있는 비우처의 잔액과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한다.

정부는 인연금 신청 탈락자에 대해

내달부터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돼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소득·재산 요건 충족시 안내해주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9월부터는 유산 햇거나 출산을 한 이후에도 입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병원마다 전자민원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상한금액이 고시로 제정된다.

국민연금을 최대 5년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중간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앞당겨 받는 대신 연금액이 월 0.5%씩 감액되는 문제가 있지만, 노후소득 불안으로 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도 앞으로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보험료 납부를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뉴스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격납용기 내부 손상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3호기 원자로 격납용기 내부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NHK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중로봇을 투입해 3호기를 조사한 결과 원자로 바로 밑에 있는 작업용 금속제 벌판이 없어지는 등 격납용기 내부가 상당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은 21일 다시 조사를 실시해 격납용기 바닥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연료 잔해물'의 모양을 점검할 계획이다.

3호기에서 핵연료가 원자로를 덮은 격납용기 밑으로 녹아 떨어져 구조물과 뒤섞이면서 '연료 잔해물'이 폐쇄 네각을 위해 주입한 깊이 6m의 수중에 끼어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중로봇은 19일 조사에서 격납용기 내부를 활영했다. 영상에서는 원자로 아래에 있어야 할 '그레이팅'이라 부르는 격자모양 금속제 작업용 벌판이 사라진 상태였다.

도쿄전력 측은 사고로 원자로에서 녹아 흘러내린 고온의 핵연료가 벌판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3호기 격납용기 내부 훼손 정도는 지난 1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2호기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의 핵연료는 2011년 사고 당시 녹아서 흘러내렸다.

도쿄전력은 이 핵연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40년 가량 걸리는 폐로(廢爐) 작업에서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다.

나이지리아 주민과 유목민 충돌 33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에서 지난 16일 마을 주민들과 유목민들이 충돌해 최소 33명이 숨졌다고 아제 카두나주 경찰국장이 19일 밝혔다.

국장은 카두나주 카주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유목민들을 공격해 유목민 27명과 마을 주민 6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비열한 행위의 책임자를 체포해 처벌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제 국장은 카주루 마을은 현재 평온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카두나주에서는 유목을 하는 무슬림들과 농사를 짓는 기독교도들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충돌 역시 지난 11일 마을 주민들의 공격을 받은 유목민 소년 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유목민들이 카주루 마을을 찾았다가 발생했다.

우루과이, 세계 최초 마리화나 완전 자유화

2013년의 역사적인 법개정에 따라 우루과이가 19일(현지시간)부터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국의 판매 약국마다 마리화나 애호가들이 장사진을 치고 구매에 나섰다.

세계 최초의 마리화나 완전합법화 국가가 된 우루과이에서는 앞으로 마리화나의 재배나 판매 등 모든 것이 합법화되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영하의 한 겨울 날씨에도 수도 몬테비데오에서는 16개의 마리화나 판매 허가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다. 건설노동자인 신타라고 피나타레스(35)는 "14살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웠지만 그 동안은 암시장에서 몰래 사야했다"며 "이를 합법적으로 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손님들은 가족이나 회사 사람들이 자신이 마리화나를 산길 알게되는 게 싫어서 언급을 거절했다.

우루과이 당국은 지금까지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지문을 찍고 한 달에 40 그램씩의 매입이 허용되는 고객으로 정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를 중 3분의 2는 수도 몬테비데오 거주자이다.

가격은 그램당 1.30 달러 정도로 그 중 90센트는 마리화나 재배회사로 신정된 2개 기업에 돌아간다. 나머지는 판매약국과 정부가 나눠가지며 정부는 이 기금을 미약중독 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정이다.

판매되는 마리화나는 포장에 정부 당국의 봉인과 함께 마약의 효과에 대한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다.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것은 그 동안 미약 임시장과 비밀거래를 둘러싸고 범죄율과 자살률이 매년 지속된 것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이었다.

새 법에 따르면 면허를 가진 개인이 마리화나를 재배하거나 클럽을 결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년연속 우수축제**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7. 7. 28. 금 ~ 8. 3. 목 7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Jeongnamjin Jangheung AquaFestival

7. 30.(토) ~ 8. 3.(목) 정남진 장흥 물축제, 강진청자축제장
연계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2017 남도물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

VISIT GANGJIN 2017 KOREA

2017. 7. 29.-8. 4. (7일간)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

[청자할인판매] 2017. 7. 28. ~ 8. 6. (10일간)

The 45th Gangjin Celadon Festival

제45회 강진 청자축제

흙, 불 그리고 사람